

# 전남 관광, 국비 712억원 확보로 체류형 전환 가속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본격화...섬 방문의 해 운영 본격화 여수·고흥·완도 등 27개 사업 착수, 글로벌 관광 경쟁 강화

전남도가 관광 분야에서 700억원대 국비를 확보하며 체류형 관광 전환과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개발과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26년도 관광

분야 국비 7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이 본격적인 건축 공사 단계에 돌입하고, 전남 섬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도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남의 섬·갯벌·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해 총 27개 세부사업, 국비 663억원(총사업비 6376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광 백승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 △완도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16억원 △고흥 선셋기든 관광경관 명소화 29억원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 3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남 곳곳이 체험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비 등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섬 반값여행'을 추진

하고, 섬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지역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화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7억원 △전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10억원 △영암 국제 바독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등이 반영돼 관광산업 육성과 미래 관광·스포츠 인재 양성의 기반

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번 국비 확보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이 가진 관광자원의 매력을 새롭게 재구성해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선보이겠다"며 "확보된 국비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1주기 광주·전남 추모대회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李대통령, 靑 첫 출근...다시 '청와대 시대'

### 봉황기 게양...명칭도 '대통령실'→'청와대' 환원

29일부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을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공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

상계업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권력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즐기는 이 대통령 특유의 성격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불통 논란'은 없으리라는 기대도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 엿보인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윤석열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중대범죄 책임"

### 尹 내란재판 중 첫 종결...특검 "법질서 훼손·국민께 큰 상처"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회 침해 3년·사후 계엄선포문 2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론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은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지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로"라며 "재왕

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인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않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서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문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보수 진영' 이해훈 발탁

### 국민경제자문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이경수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사진)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윤준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에이비플류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중주 전 농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시진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부목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MZ 사로잡았다

### 정식 개통 9개월만에 132만명 돌파...일자리·주거 등 윈스톱

광주시는 윈스톱 서비스로 개편해 지난 4월 개통한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이 이용자 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그동안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청년정책을 온라인 쇼핑하듯 한눈에 살펴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기존 청년정책 플랫폼을 독립된 통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해 지난 4월 정식 개통했으며, 26일

기준 누적 방문자 수 132만7161명을 기록했다. 기존 청년정책플랫폼 운영 시기인 2024년 방문자 수와 비교하면 약 7배 증가한 수치로, 플랫폼 전환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정식 개통 첫 달인 4월 13만2000여명이 방문해 전년 동월 대비 약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매월 12만~15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일자리·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책 검색부터 신청까지 윈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플랫폼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건만 신청 가능했지만, 구직활동수당, 장장대여 등 청년정책 12건을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종합상담, 청년 자율공간 정보, 역량 강화 학습 지원 등 실질적인 활용 기능을 강화해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플랫폼 내에는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 청년정책 총 390여건이 등록돼 있으며,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청년

참여 등 분야별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문자알림 서비스와 카카오톡 '광주청년플랫폼'을 운영해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활동가 등록 매뉴얼 신설, 디자인 교육 지원 1건만 신청 가능했지만, 구직활동수당, 장장대여 등 청년정책 12건을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종합상담, 청년 자율공간 정보, 역량 강화 학습 지원 등 실질적인 활용 기능을 강화해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플랫폼 내에는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 청년정책 총 390여건이 등록돼 있으며,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청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